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통일연구원 초청 워크숍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

목차

- | | | |
|----|------|--|
| 1 | I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현황·전망
이기동(국제문제조사연구소) |
| 5 | II |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핵외교와 남북대화
서보혁(국가인권위원회) |
| 16 | III |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
| 21 | IV | 북한의 외무성 성명 이후 후속 정세 전망
이정철(삼성경제연구소) |
| 29 | V |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남북관계
: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의 전망
정영철(서울대 국제대학원) |
| 34 | VI |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북핵문제
전병곤(통일연구원) |
| 39 | VII |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 정책과 전망
곽진오(통일연구원 북한기초연구사업본부) |
| 47 | VIII | 종합토론 |

I.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현황·전망

1. 북핵문제 현황 및 전망

- 현재 북핵문제는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라운드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공방을 지속
 -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인내의 한계를 시사하며 설득과 강제의 양면전술 展開(힐 아태차관보 지명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
 - 북한은 여건조성을 내세우면서 최고기대치로 ‘대북적시대정책’ 포기의사 표명, 중간기대치로 양자회담 개최, 최저기대치로 ‘아량’ 시혜의 기회 제공 등을 설정한 것으로 觀測(박봉주, 김정일, 외무성 비망록 등)
- 북한은 금년 상반기 중 최저기대치 차원에서 6자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展望
 - 중국의 난처한 立地를 해소해주지 못하거나 적극적 설득 노력을 무시할 경우에 초래될 손실 打診
 - 중국은 6자회담 실패시 ‘다른 선택을 고려’할 것이라는 라이스 미 국무의 주장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인식 보유
 - 상반기는 남측·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획득 또는 약속이 필요한 시점
 - 지난해 남측이 제공한 30만톤의 비료 효과에 힘입어 농업생산량 증가 입증
 - 특히 당창건 기념일(10.10)을 ‘홍성거리는 대축전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식량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
-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지리한 攻防을 거듭하면서 空轉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難望
 - 先이행과 동시이행의 문제, 북한의 HEU 문제, 미국의 대북 보상참여 문제 등 난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 간에도 서로 얽혀 있는 形局

- 韓·美·日 3국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리비아식 핵포기 방안 대신 우크라이나식을 보완한 새로운 해결방식을 제시할 必要가 있음.
 -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게 다자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HEU를 포함하여 모든 핵프로그램을 철저하고 완전한 방식 (thorough and complete)으로 폐기기로 합의
 - 부시행정부와 김정일정권 쌍방간의 상호간 불신을 감안, 미 의회는 북한이 핵폐기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을 전제로 제 2의 년-루가법안을 결의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對北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전제로 하여 유엔을 상대로 핵폐기를 천명
 - CVID 방식은 실현성이 떨어지고 북한의 극단적 거부감을 야기하는 표현이므로 94년 당시의 표현을 빌리되 내용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 다른 한편으로, 6자회담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과거 4자회담의 성격으로 轉換하는 방안도 고려할 必要 있음.
 -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6자회담의 목표순위(① 북핵문제 해결 ②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③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축) 中 과거 4자회담의 목표(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를 우선 추진
 - 이 과정에서 對北 안전보장을 대가로 북핵 폐기를 추진

2.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 현재 남북관계는 작년 7월 북한이 표면적으로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단 방북 불허 조치』와 『탈북자 대량 입국 조치』(2004.7.27~28)를 시비하여 당국대화가 중단된 채 경협사업만 순조롭게 進行
 - 이 밖에도 북핵문제, 대남사업 라인의 붕괴(김용순·송호경 사망, 임동옥 외병)에 원인을 두는 시각도 존재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3대사업을 중심으로 제도화의 단계에 진입 → 이는 북한의 對南 경제 의존도 증대를 의미
- 남북한 당국대화는 북한의 필요에 따라 조만간 호응해 올 것으로 豫想
 - 북한은 파종기(5월) 전에 비료지원 재요청이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한 남측당국의 당국대화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당국대화가 재개되어도 경제지원 및 협력 이외의 의제 不在
- 그러므로 對北 비료지원의 조건으로 비교적 의제가 다양한 장관급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妥當
 - 장관급회담급 정도는 되어야 북핵문제 및 6자회담과 관련한 의제만이 아니라 既 합의된 초보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과 관련한 내용 등 지난 회담에서의 합의 사항 전반적 재검토 가능
- 북측의 부득이한 호응 가능성과 별도로 남측은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전개할 必要
 -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7차 장관급회담(2002.8.2~4)이 9개월 만에 재개되는 데 기여

3.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對內 요인

-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 심화
 - 남한의 지원과 협력은 경제관리개선조치(부분적 개혁)와 경제특구 조치(제한적 개방)의 성공을 보장하는 관건 → 향후 정치·군사분야로의 파급영향(spill-over)의 단초
- 정치적 필요에 따른 資源의 공급지
 - 북한은 올해 당창건 60주년을 ‘홍성거리는 대축전장’으로 만들자는 선전 공세 강화 → 주민들에게 제공할 선물로 대규모 생필품과 식량이 필요

2) 對美 요인

- 미국의 大選 또는 新정부 등장과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觀望 시간이 要求
 - 5차 장관급회담과 15차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각각 新정부의 출범과 대선이 예정
 - 예정된 5차 장관급회담과 7차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모두 한·미정상회담 개최

- 이를 통해서 북한은 한·미관계 동향변화와 미국내 정치변동이 있을 경우 남북대화를 중단하면서까지 귀추를 주목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
 -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으로 불거진 제2차 핵위기 등장 이후 8차 장관급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된 것으로 볼 때, 이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북핵문제는 항시 관심사여서 별도의 관망기간 불필요

3) 對南 요인

-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 조절
 -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의 발전으로 인적교류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체제위협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 98년 민영미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등
 - 상봉 가능한 이산가족의 질과 양에서 한계를 노정할 경우
- 남북관계에서의 損益 계산
 - 특정 시기에 남북대화를 하면 남측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줄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문불허 조치와 탈북자 대량 입국사건을 빌미로 15차 장관급 회담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남측의 추가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요구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
- 이상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적절한 시비거리가 발생하면 이를 빌미로 중단

4.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시사점

- 최근의 한·일관계는 이른바 「非결정의 결정」(당장 결정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들은 일단 피하자는 결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到達
- 그러므로 한·일관계는 적지 않은 기간동안 경색관계를 지속할 것인 바,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관리해 나갈 必要
- 그 중에서도 미국의 네오콘을 포함한 보수층들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의 국민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철저히 防止

- 여중생사건과 달리, 촛불시위가 크게 번지지 않는 것은 한국내 진보층들의 대미 인식과 대일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현(일본은 과거의 지배세력이지만 미국은 현재의 지배세력)
- 따라서 현 사태에다가 反美 시위가 증첩될 경우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상존

서 보 혁 국가인권위원회

II.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핵외교와 남북대화

* 연구자의 개인견해를 밝혀드립니다.

1.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동북아 국제정치

1) 북한의 핵보유 선언

- 제2기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아래와 같이 대단히 부정적임. (외무성 성명, 2.10)
 -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입장을 밝힌 미 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 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음”
 - “결국 2기 부시 행정부의 본심은 1기 때의 대조선 고립 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 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임”
 - “부시 행정부가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 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낙인 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어떤 명분도 없음”
- 북한은 위와 같은 대미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입장 완화와 협상 재개시 유리한 분위기 확보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임”

- “둘째,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임”

2) 핵보유 선언 의도

- 미국 정부의 북한 자극론(중국 환구시보, 2.19)
 - 북한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대북정책을 주시했으나 기대에 못미쳤다고 판단했음.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를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 “북한 주민은 폭압정권 치하에서 겁에 질린 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등 북한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음.
 - 이와 관련해 북한은 “조선의 초강경 대응을 더 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면서 압력정책의 강화로 시간을 낭비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큰 실책”이라면서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 세 번째 핵보유국이 탄생하게 됐다”고 주장함(조선신보, 2.19).
- 국제사회 이목 끌기용
 -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도 미국에 대해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6자회담에서 실제로 받을 뻔 생각은 아님.
- 6자회담 재개시 협상력 제고용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11일 언급했듯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원하는 등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회담 테이블에 앉고 싶어함.
 -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통해 제시된 조선의 결단은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며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해 부시 행정부가 구상한 압력과 봉쇄의 장기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은 조선에 최후 승리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2.19).

3) 북핵사태와 동북아 국제정치

- 미·일동맹 강화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금번 일본 방문 중, 미·일동맹이 ‘지역동맹’에서 ‘세계동

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힘. 그는 또 미래의 양국관계를 위해 '전략적 발전 동맹 구상'을 제시하였고,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이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함.

- 미국은 세계안보전략 재편방침(선제공격, 동시전쟁 수행능력 확보, 미군의 기동화·첨단화 등)에 의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속에서 주일·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역할 및 활동범위 확대함. 특히 미국은 일본 요코타의 5공군사령부와 괌의 13공군사령부를 통합하여 공군력의 효율적 운용을 추진중임.
- 일본은 2004년 12월 '신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하고 군통제체제의 통합, 자위대 군사력 증강 및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¹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 주일미군과의 효과적 협력을 위해 연합훈련,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성능개선, 작전운용 등에서의 협력을 강구하고 있음.
- “지난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며 ‘대만해협과 관련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 전략목표에 포함시켰다. 대만 문제를 공동 관심사로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것이다.”(셀릭 해리슨, 한겨레, 3.14)
-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사실상의 대북제재와 북한인권법 상정 등 대북압박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 가운데 남북 일본인의 유골이 가짜라는 의혹마저 일어나 독도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일본내 반북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음.²

● 중국의 딜레마

-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이라는 기조하에 ‘첨단기술 조건하의 국지전 승리 전략’ 아래 인민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 중국 군당국은 자신을 ‘하나의 중국정책’을 실현하는 물리력으로도 보고 있음.
- 리빈 주한 중국대사는, 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의 ‘2+2’ 외교·국방 회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전략적 목표로 삼은 데 대해 “미·일동맹은 냉전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쌍무적 관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범위가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¹ 일본은 ‘신방위계획 대강’에서 자위대의 국제협력활동을 기존의 ‘부가임무’에서 ‘주요임무’로 전환시켰음.

² 남북 일본인의 유골 진위 감정은 국립 일본과학경찰연구소 등 3개 팀이 맡았으나 테이쿄대학(帝京大學) 감정팀만이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일본에서 반북 여론이 높아졌음. 그러나 최근 테이쿄대학 감정팀의 한 연구원이 유골 샘플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처음 감정이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함(연합뉴스, 3.20).

- 셸릭 해리슨은 “중국인의 눈으로 보면 일본은 여전히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투자와 무역을 통해 이미 상당 수준의 경제적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확대해 다시 한번 대만을 일본의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라고 분석함(한겨레, 3.14).

● 전망

- 미·일과 중국 간의 대치가 격해질 경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름(동아일보 사설, 3.15).
-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순방을 평가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진정으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였지만 성과없이 중국의 역할에만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하려면 한국이 대북 제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문함.
-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는 6자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경우 일본은 대북 제재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함(연합뉴스, 3.23).

2.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남·북·미 3자의 입장

1) 북한 : 6자회담 참여를 위한 명분쌓기

● 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

-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3월 22일,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이 6자회담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조건이 되면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북측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재확인함(조선일보, 3.22).
- <조선중앙방송>은 3월 21일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연습 실시를 “대조선 핵 선제공격을 노린 시험전쟁이자 예비전쟁”이라며 이에 맞서 핵 무기고를 더 늘렸다고 밝힘.

- 같은 날 <평양방송>도 “미국이 조·미간 핵문제를 해결할 입장이라면 우리에게 대한 적대의사를 포기하고 최소한 상대방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협상력 강화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월 22일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미국 추종을 비난하면서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 3월 2일 외무성 비망록은 “미국이 믿을 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한다면 어느 때든 회담에 나갈 것”이라며 밝히고, 회담 개최의 조건과 명분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및 북·미 공존의사 천명 △‘폭정의 종식’ 발언 사과·취소 △‘동결 대 보상’ 원칙 존중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조선일보, 3.23).

2) 미국 : 유엔으로 가는 명분쌓기

● 기본 원칙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직후 △6자회담 붕괴 불용 △한반도 비핵화 △확산위협 경계 등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간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함.

●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 노력

- 부시 미 대통령은 2월 17일 “지금은 (북핵)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의해 이 문제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지를 결정할 때”라고 말함.
- 로버트 줄릭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월 15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과 관련,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은 핵심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6자회담의 기본틀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미국은 작년 6월 제안의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상도 없다. …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지금은 외교적인 해결방식에 치중하고 있다.”(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 핵심당국자, 조선일보, 2.11)
- 리비어(E. Revere)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3월 11일 “(미국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에야 북한에 이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함. 그 하루전 디트라니(De Trani) 대북특사도 “미국안도 북한이 우라늄 계획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게 핵 폐기를 공약하면 우선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 공약을 실천하면 관계정상화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이어서 사실 동시적인 셈”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그는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전 양자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음.

● 압박 가중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정책 철회’를 연막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과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2월 14일, 대북 경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민 보호와 우방의 이익을 위해 화폐 위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마약 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미국의 사법 당국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함.
- 체니 미국 부통령은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하면서 “김정일이 핵무기와 고립 심화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길 원한다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나라들이 공동대응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NYT, 2.12).
- 힐 주한 미대사도 2월 18일, 북한이 핵을 추구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 “6자회담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함.
- “6자회담을 통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6자회담 참여국들과 논의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핵문제를 상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럴 경우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얻어내기 위해 의견조정에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 핵심당국자, 조선일보, 2.11)
- 하이드(H. Hyde)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3월 10일 6자회담관련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폐기의 대안은 없다”고 말함.

● 남북관계 조절

- 폴 울포워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4일 방미중이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올해 비료 50만톤을 요청한데 대해 ‘미진한 대응(under reacting)’이

필요하다고 말함(연합뉴스, 2.17).

-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도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 “동일한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조율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측이 한국측에 공동보조를 요청했음을 시사함(2.18).

< 라이스 미 국무장관 동북아국가 순방중 대북 주요 발언 및 보도 >

● 대북 인식

- “(북한은) 민주적이지 않고 자유롭지도 않으며 자국 국민을 최우선시 하지도 않는 나라”
-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철회 의사 없음을 간접 시사

● 6자회담 재개 노력

- “북한은 주권국가이고, 파월 前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으며,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6자회담 참여국들은 연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 “6자회담은 북한이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길이다.”
-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안보공약과 관련해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야망 포기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는 데 있어 6자회담 관련국들, 특히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국은 모든 관련국들에게 북한이 회담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

● 전망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도통신>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순방이 끝난 후 대북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관계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함(연합뉴스, 3.19).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게리 새모어 연구원은 “미국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접근법으로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연합뉴스, 3.18).

3) 남한 : ‘정직한 중재자’ 역할의 난관

● 3단계 대책

- 사태악화 방지 → 중국 설득 → 회담 복귀시 ‘당근’ 제공(연합뉴스, 2.17)
-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을 조기 재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음.”(반기문 외교부장관, 2.16)

● 6자회담 고수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2.16)고 지적하는 동시에, “그러나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함(2.17).
- 노대통령은 3월 20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 당사국간 회담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같은 날,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 양자대화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김대중 前대통령도 17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대해 “북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검증받겠다는데 (미국이) 왜 안전보장을 확실히 안 해주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함.

● 남북경협 조절 및 인도 지원 유지

-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북한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고 언급함.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1일 북한의 비료 50만톤 지원 요청과 관련, “비료지원은 북핵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되면 그 테이블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함(연합뉴스, 2.22).

3. 한국정부의 북핵외교와 남북대화

1) 북핵사태와 6자회담의 성격

- 국가주권과 초국적 규범의 갈등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차 6자회담(2003.8.27~29)이 개최되기 2주일 전, 미국에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하며 그 기준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방해 중단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
 - 미국은 (북·미 양자간 관심사가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역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사이며 세계 비확산체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제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
- 다자-양자회담의 장
 - 북한은 “6자 회담은 명실공히 조·미 사이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의 마당”이라고 보고 있음(민주조선, 3.22).
 - 미국은 6자회담 틀내에서 상호 대화가 가능하다고 봄.

2) 북핵사태 해결의 방향

- 장기적 방향 : 동북아 비핵지대화
- 중기적 방향 : 북·미관계 정상화
- 단기적 방향 : 북핵 포기과 대북 안전보장의 동시교환

3) 남한정부의 과제

가) 정책방향

- 정책 기조
 - 6자회담의 지속을 통한 북핵사태의 평화적·상호주의적 해결 추구
- 당면과제
 -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미국(일본)의 PSI 혹은 대북제재 발동전 제4차 6자

회담 개최

- 6자회담 재개시
 - 북핵 포기과 대북 안전보장 및 에너지 지원의 일괄타결(정치회담)
 - 상호주의적 이행을 위한 단계 및 방안 합의(전문가회담)
 - 이행 공동감시(실무회담후 감시기구 가동)

나) 대미 협력방안

- 6자회담 재개 및 유지
 - 6자회담은 북핵사태 관련국들이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합의한 최선의 기회의 창이며, 현재 모든 참여국들이 6자회담의 의의와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음.
 - 나아가 6자회담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공동안보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바, 6자회담의 중단시 북핵사태는 낙관하기 어려움.
- 대북정책 공조 강화³
 - 여기에는 외교적 수단의 범위 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이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북한과 적대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성향 및 반복 여론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포기를 유인할 수 있는 공동의 일괄타결 방침을 이끌어내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공동의 북핵 해법 마련
 - 한국정부는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함을 이해시켜 양국이 한국의 북핵 해법에 동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제2-3차 6자회담에서 차례로 밝힌 북핵 해법에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상황 악화시 대책 수립
 - 그러나 북·미간 입장 차이가 외교적 수단으로 개선되지 않고 물리적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를 대비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 대응을 자제하고 통일적인 대비를

³ 라이스 장관의 방일에서 미·일 외무장관은 북핵사태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합의함.

할 필요가 있는데, 양국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 다층적 협의 채널 가동
 - 정보분석 채널
 - 실무협의 채널
 - 핫라인 가동 등

다) 새로운 남북대화의 모색 : 남·북 핵대화

- 방식 : 특사 파견, 장관급회담, 국방장관급회담 등
- 기본 합의점
 -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및 지속과 남북교류협력(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득
- 전달 및 협의 내용
 -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시 북핵협의 내용 설명
 - 6자회담 재개의 유용성과 6자회담 표류시 북한의 손해 설명
 - 인도주의적 지원, 경제협력, 민간교류 등 지속 협의
 - ☞ 이상을 통하여 북핵사태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 증대와 남북관계의 군사적 분야로의 발전을 도모함.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Ⅲ.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

1. 북핵문제를 둘러싼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 한·미·일 3각동맹의 변화
 - 현시기 한·미·일 3각동맹은 냉전시대의 고착된 구도에서 고정된 역할이 아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변동기
 - 한·미동맹의 기본축 유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 각각 동일한 수준에서 협력하는 상황으로 변화
 - 정부의 이같은 전략적 판단은 최근 북핵문제와 함께, 독도문제로 촉발된 대일관계 대처과정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
 - 한국, 중국 등의 '유보'적 입장 속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부시정부의 지지(3월 19일 도쿄, 라이스 미 국무장관 재천명)가 확고함. 한국정부, 특히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과 미국의 북핵전략
 - 북핵문제, 『반국가분열법』에 대한 중국과 대만 대립, 한·일간 독도문제 등 한·중·일 3개국이 이상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음.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순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중·일간의 조율된 공동의 입장 정리를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임.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순방 초 북한과 양자회담 가능성 일축 → 한국에서 6자회담 틀 내의 양자회담 수용 가능성,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발언(그러나 실제 한국정부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는 한·미간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함) → 중국에서 안보리 회부를 시사하는 압박 등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문제에 접근
 - 일견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의 북핵전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돌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이같은 강온전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5년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 회부설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2005년 6월은 6자회담이 공전한 지 1년, 지난 2003년 봄 베이징에서 시작된 3자회담이 가동된 지 2년이 되는 때임.
- 중국의 대북전략
 -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항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을 외교목표로 하고 있음.
 - 양안문제에 대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지지’ 입장 유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공 개최, 경제성장 지속 등을 위해 중국은 북핵문제가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을 가져오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음.
 - 대북관계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을 지렛대로 점진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임. 중국은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는 상황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요구할 것임.
 - 박봉주총리 방중 기간 동안 ‘투자 촉진과 보호 및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은 동북3성+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남북경협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북한이 경제의존 축을 중화경제권으로 옮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중국이 북·중 경협의 강화를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봄.
- 한·일간 긴장 고조와 북핵문제
 - 독도문제로 촉발된 한·일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공식적으로 양국이 독도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대처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한·일간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북핵문제 현안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큼.
 - 노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정부의 일련의 대일 강경발언은 현 수위를 더 이상 넘어서는 안될 것임. 더 나아가다면 한국정부가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한·일문제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미국 등 내외에 심어 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
 - 이제 독도문제는 민간차원에서 대응하고,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협력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임.

2. 북핵문제 현안

● 북·미간 상호 불신 해소 문제

- 북한은 '2.10 성명'을 통한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전격 선언, 외무성 비망록(3.2)을 통한 6자회담 참가의 조건과 명분, 즉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죄 및 취소,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정책 포기, 평화공존 의지 천명 등을 거론한 바 있음.
- 이는 북한입장에서 6자회담이라는 논의의 틀만 만들어놓고 미국이 '시간벌기'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더 이상 미국의 움직임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카드는 미사일 시험발사이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은 '폭정의 전초기지' 등 일련의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으나, 최근 강온전술을 병행하고 있음.
- 북핵문제 해결은 상호 신뢰에 기반할 수밖에 없으나, 현재 북·미간 이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 조성은 단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역할

- 북·미간 양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주목·요구받고 있음.
- 라이스 및 박봉주의 방중과정에서 중국이 북·미간 메신저 역할 및 조율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큼.
- 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테이블로의 복귀를 위해 경제지원 및 협력문제 등으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임.
-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자제와 적극적인 해명, 6자회담 과정에서 북·미양자회담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역할

- 현재 공식채널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채널을 활용하여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올 상반기 중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상반기 중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의 고조 가능성,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인권문제 제기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임.

- 참가국들의 조율을 통한 북한 설득과 6자회담 조기 개최
 - 북핵문제 해결 이후가 아니라 해결국면에서 5개국이 구체적인 북한체제 보장 및 지원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은 임기응변식의 단기 조정만, 그것도 한·미·일이 참여하는 협의만 이뤄져 왔음.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설 운영되고 집행력을 갖는 5개국 관련 최고 실무자급의 협의·조정기구 설치가 요구됨.
- 6자회담 전망
 - 북핵문제는 당분간 미국의 강온대응의 반복, 북한의 현 기조 유지 대응 등으로 평행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은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미국은 안보리 회부 카드를 모색할 수 있으나 중국의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갖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회담 참여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임.
 - 상반기 중 조기 개최가 바람직하나, 현 상황에서는 10월 전후쯤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로동당창건 60주년 기념일) 이전 개최를 희망할 것으로 보임.

3. 남북관계 현안과 대책

- 남북관계의 현 상황
 - 현재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위기관리차원의 남북관계를 위기돌파 차원의 남북관계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할 전환기적 상황임.
 - 2004년 7월 정부의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 불허, 대규모 탈북자 입국 등으로 정부간 회담 정지, 공식적인 대규모 민간교류 중지 상황임.
 - 비공식적인 정부간 라인은 가동되고 있으며, 소규모 민간 교류 역시 진행중임.

1) 정체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책

-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특사라인 구축
 - 공식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관급회담이 복원된다 해도 6자회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어려운 구조이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협의만 가능할 것임.
 - 6자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김정일위원장에게 현재 한반도 내외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북특사 파견이 절실히 요구됨. 현재 김용순 비서의 사망과 장성택의 일선 후퇴로 김위원장에게 이를 설명하고 직언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노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김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필요성이 큼.
 - 김대중 前대통령이 거론되기는 하나,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임. 김 前대통령은 보다 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만델라, 클린턴 등).
 - 남북한 공식 특사라인 구축을 통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상회담의 준비
 - 당장의 정상회담은 여건상 개최되기 어려우나, 6자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또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6자회담에서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각각에 맞게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할 필요
- 총리급 회담의 복구
 - 기존의 장관급회담과 함께 부문별 장관급 회담의 제도화 및 총리급 회담을 통한 대화수준 격상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 북한이 요청한 비료 50만톤 지원 등을 정부간 회담 복원을 전제로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
 - 국가보안법 개폐, 남북관계관련 법규 정비, 주적 문제 해소
 - 남북관계의 돌출적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하는 조치 필요 (즉 5-6월 꽃게철 서해5도 해상 충돌 방지 등).

4.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의 남침 저지에서 ‘동북아 기동군화’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 주한 미2사단의 미래형 사단(UEX) 전환 문제 등으로 현상화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한·미군사동맹 구상의 변화를 예고함. 즉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며, 지역방위는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실질적 재편이라고 판단됨.
- 이 구상에 한·미간 ‘전략적 목표에 대한 긴장’이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음. 즉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지역동맹화하려는 반면, 한국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임.
- 당장 중국·대만간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직접 개입할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우리의 의사에 반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강행할 수 없도록 시급히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정 철 삼성경제연구소

IV. 북한의 외무성 성명 이후 후속 정세 전망

1. 북한 외무성 성명 약속

- 2월 10일자로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에 관한 외무성 성명을 발표
 -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임.
- 부시 행정부의 적대시정책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를 병기
 -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

핵화 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음.

2. 북한 외무성 성명의 의도

- 부시 행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면서도 한편으로 협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양동전술
 - 부시 취임사, 라이스 국회 청문회 등을 분석한 결과 전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체제를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
 - 부시 2기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지 않겠다는 선언
 - 이후 왕자루이와의 면담 과정에서 김정일은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명한 데 대한 해명,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양자회담 보장, 대북 경제적 지원에 미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
 - 이후 3월 2일의 비망록은 북한의 입장을 더욱 상술하고 협상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보충하였으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거론하여 여전히 양면전술 지속
- 더 이상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한 선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부시 취임사 등의 핵심 기조는 이미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겨냥한 독재 종식과 자유의 확산
 - 따라서 북한은 핵 문제는 어차피 협상의 핵심 문제가 아니고 구실일 따름이라고 판단
 - 인도 및 파키스탄 같이 핵보유를 선언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선부른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임.
 - 이라크, 이란 등은 모호하게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려다 당한 나라들이라고 판단
- 이 점에 관한 한 북한 내에서 강은 대립은 없음.
 - 군부와 외교부 간에 이견이 없음.
 - 외교부 성명이 농민시장 장사꾼을 적대시한 점은 향후 북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기도 함.
- 남북관계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민관분리 대응이 기조
 - 공동사설은 조국통일을 위한 3대공조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을 제시
 - ‘민족공조’나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왔지만, 3대공조를 구체

- 화한 것은 최초
 - 3대공조를 제기한 것은 2005년 남북관계를 민간급교류와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의미
 - 3대공조의 내용이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제기한 것은 당국간 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우회적 표현
 -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노무현 정부를 YS와 동일시하는 시각을 강조
 - 대북 특검 이래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불신이 조문 파동, 탈북자 집단 입국 등으로 증폭
-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신북방 3각 관계 형성 노력을 병행
 - 최근 중국 및 러시아의 관계가 호전되어 북·중·러 3국의 대미 견제노선이 가능하다고 판단
 - 7월 중에 중국 영토에서 중러 공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북한도 훈련에 참가할 예정
 - 올 중으로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예상

3. 향후 전망

1) 동북아 新냉전 가능성 검토

동북아 新냉전 가능성에 대한 양론

	낙관론	우위	비관론
정치	- 중·러 관계는 동상이몽	=	- 중·러 40년만에 국경분쟁 합의
경제 교류	- 역내 경제협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활성화 - 러시아나 중국 모두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히 필요	>	- 동북아 에너지 자원 갈등이 심화 - 러시아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세력 확장 시도를 독재자로 비판
군사	- 북방 3각 對 남방 3각 구도는 미국의 반테러전 기초 하에서는 무의미 - 북핵문제는 비확산문제일 따름	<	- 미국이 MD구축 등 對북방 관련 공격적 미군재배치를 가속화 - 일본은 “新방위대강”에서 북한·중국을 안보위협요인으로 최초 규정 - 중·러, 최초 합동군사훈련 합의

■ 러시아

- 미·러 정상회담은 성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
 -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는 이란 핵 수출을 재발표하여 부시 행정부의 대러관계는 불확실
 - 푸틴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에 대해 강경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
 -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구성
-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新밀월관계 형성을 시도
 - 중국과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40년을 끌어온 국경 분쟁을 매듭지은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
 - 국경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대폭 양보
- 이같은 대응이 본질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이지는 불확실
 - WTO 미가입 상태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는 등,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혜택이 만만치 않아 러시아의 대미 견제의지 의문

■ 중국

- 미·중관계는 3년간의 안정기를 거쳐 불안정기로의 전환이 우려되는 시점
 - 미·중관계의 특징은 협력과 경쟁, 갈등이 공존하면서도 롤러 코스트처럼 기복이 있는 관계
 - 최근의 안정기 이후 불안정기 도래 가능성 점증
 - 대만문제, 인민폐 평가 절상 문제, 인권문제 등 중·미간 갈등의 여지는 다수
 - 중국은 저비용의 안정적 대외관계를 위해 우회적 다극화 전략 선호
 - 미국과 동상이몽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측 변수가 중요
- 북·중관계는 최근 양호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특수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추세
 - 북·중관계는 92년 이후 악화된 관계가 99년부터 회복되었다가 2002년에 일시 경색, 2003년 하반기 이후 재회복된 상황
 -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독립변수

로서의 가치는 감소

- 최근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활력을 띠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동북4성의 하나로 취급한다는 동북공정과 같은 취지 하에서 진행된 것임.
 - 중국의 대북 일반무역은 증대하고 있으나 무상원조는 감소 추세
- 단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을 지원
 -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이나 공조냐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달린 것임.
 - 중국은 북한 외무성 성명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 한국, 일본의 언론이 과잉반응한 것이라는 입장

■ 일본

- 일본은 21세기 미국의 핵심 동맹국(key ally)으로 미·일동맹을 對중국견제를 위한 해양동맹의 성격으로 확대, 강화하고자 시도
 - 일본과 미국은 군사력의 첨단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방어체제 구축에 적극적
 -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첨단기술 접목이 용이한 점을 적극 활용
 - 일본은 “新방위대강”을 9년 만에 개정하여 확정 발표(2004.12.)
 - 북한, 중국을 안보불안 요인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미·일군사동맹과 일본의 방위력 확충의 방향을 제시

방위대강 주요 개정 내용

	기존 내용	개정 내용
안보위협국가	러시아	중국, 북한, 러시아
기본원칙	전수방위, 비군사 대국화, 무기수출 3원칙	동일(단,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MD 구축을 위한 무기수출을 예외적으로 인정)
미·일안보체제	침략사태 발발 초기부터 미국과의 협력 상정	기존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조

-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 협상론도 강경 매파의 거센 반발로 좌초될 위기
 - 9월 개각에서 가와구치 前 외상과 북한통인 아마자키 타쿠 前 자민당 부총재를 보좌관으로 발탁하여 총리관저 주도 외교를 천명하였으나 매파의 반발 앞에 무력화
 - 외무사무차관에 내정되었던 대북 유화파인 다나카 히토시 심의관을 배제하고 강경파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60) 관방부장관보를 28일 임명
 - 사실상 미국 네오콘을 대리하여 일본이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
 -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으로 반대
 - 유골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우파의 세력 확장) 해석 가능

2) 미국의 대북 정책과 대북 변화 가능성 검토

■ 예측 가능한 미국의 대응

-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내에서만 다룰 전망
 - 외교와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이 확고(Managed Pressure)
 - 6자회담 밖에서 북한과의 양자대화는 없을 전망
 - PSI 등 대북 압력 수단은 전방위로 가동
 - 중동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가 동북아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핵 문제 장기화의 한 측면
 - 부시 정부에게 대북 정책 및 북핵 문제는 동북아 정치 게임의 하위 요소일 따름으로 북한의 핵 선언은 돌발 변수가 아님.
- 이라크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최소한 1년간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
 - 중동 정책이 마무리되고 동북아 정책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한 정권을 폭정의 잔존기지(outposts of tyranny)로 규정
 - 집권 2년차 이후에도 북핵문제가 지속될 경우, 북한 국내 문제에 본격 개입하여 북한 정권 교체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칠 전망
 -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이 가능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협상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요구 일반(humanitarian needs)으로 다루는 접근법 개시

■ 정책변화 ‘가능성’ 검토

-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2가지 원인으로 분석 가능
 - 하나는 부시 행정부의 복음주의적(evangelical) 외교 정책
 - 다른 하나는 동북아에 집중 가능할 때까지 북핵 문제를 빌미로 동북아에 교착 상태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측면
 - 이라크전의 우선순위에 밀려 부시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이 원치 않는 변화를 막고자 한다는 의미
- 후자의 측면이 북핵문제 교착의 중심적인 요소였다면 정세 변화 여지가 발생
 - 전자가 중심 요소라면 미국과 북한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로 이라크전이 마무리될 시점에 한반도 위기가 도래할 전망
 - 미국의 김정일 정권 붕괴 공작이 전천후로 전개될 전망이고, 이에 대해 북한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
- 미국의 정책 변화 프로세스는 두가지 차원에서 예측 가능
 - 미국이 최근 외교관계에서 대국민 직접외교(Public diplomacy)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을 변화로 강제하는 함정

< 미국의 對국민 직접외교(Public Diplomacy)의 역설 >

- 대국민 직접외교는 해당국 정부를 배제하고 그 나라 국민에게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
 -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해당국 국민에 대한 이해도, 접근도가 높아질수록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최근 크리스토퍼 힐 대사 부임 이후 한국에 대해 직접 외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
- 다른 한편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 즉 라이스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제시되는가의 여부
- 러시아 전문가로서 대공산권 협상 전문가인 라이스 주도의 대북 협상안이 제시될 경우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음.
 - 힐 또한 분쟁 협상전문가이나 동북아차원에서는 경량급이라는 평

3) 전망

- 부시 행정부가 자유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산을 주된 과제로 제기함에 따라 부시식의 자유, 도덕, 가치에 대한 이념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부시 행정부는 동맹 체제 재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영국, 호주, 일본을 각 지역 맹주로 한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유럽의 구 동맹국과 관계 개선, 동유럽의 신동맹국을 연결하고자 시도
 - 부시 및 네오콘 세력이 이념전을 수행할 물질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국무부 라인업은 현실주의적 시각(라이스, 졸릭, 크라스너, 힐 등)
 - 문제는 백악관과 국방성인데, 이들은 라이스가 국무부로 간 이후 더욱 강경일색이 되었다는 평
- 미국 정부는 최소한 1년간 강경대응을 모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라이스는 압박과 제재를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 외교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명(The Time for Diplomacy is now)
 - 이라크로부터의 탈출 로드맵이 불확실
 - 이란 핵 문제 또한 미국이 중동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지점
- 결국 시간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일한 패자(敗者)는 한국일 따름.
 - 4차 6자 회담은 상반기 중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서도 성과가 없으면 6자회담 체제는 붕괴된다고 보아야 함.
 -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북한의 고립 상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양보를 해주어야 함.
 - 그러나 북한 자체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 한, 북한을 위해 미국이 중·러에 양보를 하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그나마 1년 후의 상황임.
 -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한·미외교와 연동시키는 오류를 범해왔던 점이, 한국만이 동북아 게임에서 유일한 패자로 된 원인
 -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로부터 과감히 탈피할 시기

- 한국 정부의 입지는 전례없이 좁은 상황이므로 위험수위가 높은 돌파형의 대안이 불가피
 - 조성되는 정세 추이를 쫓아가서는 신냉전 속에 갇히는 형국으로, 선택된 역할에 따른 소극적 행태 외에 대안이 없음.
 - 정상회담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정황상 정상회담이 어려우면, 총리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정상회담 등 남북회담에 대한 출구론적 발상에서 입구론적 발상으로 전환할 필요
 - 현재 불안정한 한·일관계는 사실상 미국의 무리한 동아시아 구도가 빚어낼 수밖에 없는 파열음이므로, 정교한 외교적 담론을 통해 지속할 필요
 - 동북아 균형자 운운은 행동보다 담론이 늦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실패 가능성이나 역풍 경계 필요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V.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남북관계 :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의 전망

1. 북한 핵보유 선언과 남북관계 전망

- 북한 2.10성명의 의미
 -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책과 협상 촉구의 의미
 - 6자회담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승부수(양자회담을 목표로)
- 북·미관계 전망
 - 당분간 교착상태 지속 : 라이스의 발언(북한은 주권국가-별다른 효과 없을 듯)
 - 미국은 당분간 무시 전략 - 점차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
 - 북한 역시 조건과 명분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
 - 주변국의 중재 노력 : 중국 변수(박봉주 방북 성과와 후진타오 방북)

- 남북관계 전망
 - 당국간 대화 복원을 당분간 어려움(작년부터 시작)
 - 한편으로 민간단체들간의 교류·협력 강조(신년사 : 3대공조)
 - 2005년이라는 상징적인 해 : 대규모 민간교류, 행사중심의 민족공조 노력
- 남한의 어려운 처지
 - 미국과 북으로부터 동시적 압박
 -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둘러싼 정부-민간 갈등 가능성
 - 다른 한편, 민간 단체들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의 가능성

2.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 1990년대 이후, 민간 교류의 양적 확대
 - 인도적 지원 중심의 지원 운동 팽창-협력 단계로 진입 중
 -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로의 팽창
 - 인적 교류의 확대 : '1만인 방북 시대'
- 성과와 한계
 - 대북 인식의 전향적 태도 확산
 -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통한 평화 분위기 확산
 -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도약 미흡
 - 지원 중심 대북 교류의 한계
 - 남한 내부의 갈등 확대
- 과제
 - 대북 지원 사업의 행사 중심적 성격에서 탈피
 - 구조적, 제도적 협력관계 구축
 -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 대국민 동의 확보와 갈등 해소

3. 올해 사회문화 분야 교류 전망

- 북한의 2005년 대남 정책
 - 신년사 3대 공조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 6·15 5주년 / 광복 60주년 강조
 - 민간단체 중심의 대규모 교류·협력 가능성
 - 당국간 대화는 당분간 어려움.
- 북한 대남 사업 재정비
 - 북한 대남 부서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 일종의 대남 사업 정비
 - 당적 지도의 통일성 강화 :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일원적 지도체제 구축
- 북한 내부의 사정
 - 각 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실시로 인한 남측과의 교류·협력 가능성 확대
 - 현재의 비료 지원 : 당국간 대화 소극적,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요구
 - 핵보유 선언 이후, 사회적 긴장의 강화-선군혁명총진군대회 등
 - 7·1 조치 이후, 사회통합의 문제(빈부 격차 등)
 - 내부 긴장 상태 강화와 평화 공세 필요성(민간 교류·협력의 필요성 증대)
 -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확보
- 3대 공조를 위한 대규모 민간 교류 및 행사
 -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다양한 사회단체들간의 교류, 협력 적극화를 시도)
 - 6·15 / 8·15 대규모 행사 : 3자 연대의 합법적 구축
 - 8월부터 예정된 '아리랑 공연' : 남측 민간단체 대규모 초청 가능성
 - 부분적으로는 지자체(혹은 국가단위 직능단체) 등의 준국가기관들과의 교류 가능성

4. 현 정권과 남측 통일운동단체의 갈등 가능성

- 핵문제 악화와 한-미 갈등 가능성
 -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정책 갈등 가능성
 - 미국의 강경정책과 남한의 반발(어려움)

- 민간

- 대규모 행사와 소규모 행사의 적절한 배합
 - 6·15 행사/8·15 행사-계층간 교류·협력
-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모색
 - 역사/독도 문제 등
- 남북 교류에 따른 남남 갈등 문제

- 기타

- 6·15 이후, 8·15를 기점으로 북측의 대규모 방남 가능성 대비
 - 핵문제로 인한 충돌 가능성 : 정부 대책과 민간 대책
 - 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 : 정부와 민간의 대응
 - 8월달 아리랑 공연을 둘러싼 마찰
 - 남측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정부의 대응은?
 - 이를 둘러싼 진보진영과 정부/보수진영과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
 -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 결국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추진이 할 수 있는 일
 - 정부의 핵-교류 병행추진-병행인가? 연계인가?
- 결국 올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양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진행될 가능성-이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은 당국간 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현재의 비료지원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향후 행동 /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행사와 아리랑 공연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지금부터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

전 병 곤 통일연구원

VI.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북핵문제

1. 2005년도 동북아정세

- 동북아정세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2.10)을 필두로 군비경쟁, 과거사문제, 대만문제, 영토문제 등이 표출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다른 한편, 경제교류 및 협력 증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어 2005년도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중요한 한 해임.
- 불투명해진 4차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부가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결정하는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인 위상 증대와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
 -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북·중·미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있음.
- 특히, 10기전인대 3차회의(3.5~14)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합법화한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됨에 따라 양안관계는 물론 대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반국가분열법」과 동북아정세

1) 「반국가분열법」의 제정의도

- 이번 대회에서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민진당 정부가 추진해온 대만의 법적 독립시도에 대응하여 이를 저지하고 기존의 대만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대만문제에 대해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不放棄武力)’는 기존 표현을 ‘비평화적 방식(非和平方式)’으로 수정하였는 바, 이는 무력행사를 포함해 경제제재·

해협봉쇄·외교적 수단 등을 동원해 대만독립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

- 비평화적 방식의 시행절차를 ‘先 실시·後 보고’ 체계로 규정한 것도 무력사용의 신속성 및 현실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됨.

- 「반국가분열법」은 직접적으로는 대만의 독립 세력을 겨냥하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는 신장(新疆)과 시짱(西藏)의 독립활동과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도 대응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할 당시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음.

2) 「반국가분열법」 이후의 동북아정책 방향

- 「반국가분열법」 이후 평화발전(和平發展)론과 책임대국론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대외정책의 기초는 유지될 것임.
 - 즉, 종합국력의 신장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되,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데 있음.
- 다만, 국가주권과 영토수호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왔던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된 바, 향후 이 법안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지지를 얻으려는 행보가 본격화될 것임.
 - 러시아·북한·파키스탄 등이 지지한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반대를 표명했음.
- 중국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대만국민을 의식해 이 법이 전쟁을 합법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 유화책을 전개할 것이나, 대만은 강경대응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어 양안관계는 당분간 교착 및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 무력사용의 빌미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독립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중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경우 현상유지책이 지속될 것임.
- 대미정책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나, 「반국가분열법」 통과로 대만문제를

-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중·미간 갈등 추세는 증대할 것임.
- 미국은 『반국가분열법』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지역의 현상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하였음.
 -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을 경계해왔으며, 특히 북핵문제, 미·일동맹의 강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등을 대만문제와 연동하여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해왔음.
 -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카드로 이에 대응하는 한편, 상해협력기구(SCO)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세안(ASEAN) 및 인도 등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것임.
- 중·일관계는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치 분야에서의 경쟁이 공존하는 가운데, 『반국가분열법』의 영향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갈등이 확대될 것임.
 - 중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해왔으며, 미·일동맹의 강화로 확대된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대만문제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10기전인대 3차회의 직후 온자바오(溫家寶)총리가 제시한 관계개선의 3원칙인 ‘과거사문제의 성의 있는 처리·대만문제 불개입·경제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해 볼 때, 양국관계의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 대리정책은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일의 외교·국방장관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담, 2.19)에서 강화된 미·일동맹에 대응,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계획(9월 예정)하고 있으며, 경제무역과 에너지 협력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임.

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1) 기본 입장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핵 불용,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왔음.
 -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의 핵 확산을 초래하고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고조

-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함.
 - 후진타오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하여 자국의 외교안보적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북한 체제의 유지를 중시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접근하고자 함.
 - 북핵문제를 대만문제와 함께 미국의 대중견제의 연장선상에서 간주하고 있음.
 - 북핵문제를 미국의 주도권 대 북한의 생존권 구도로 파악해 북한체제의 유지를 중시하고 대북 협력지원을 강화함.
 - 강대국의 견제와 주변국의 중국위협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외교의 참여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임.

2) 역할 전망

- 중국은 북한의 최대교역국(2004년, 13억 8,521만 달러)이자 최대투자국(2004년, 1억 7,350만 달러)일 뿐만 아니라 식량·에너지 등의 무상원조와 비공식적인 국경 무역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유사시 자동개입이 가능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적지 않음.
 - 중국역할 회의론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중국의 의지가 불일치하는 데 있음.
-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박을 행사하기보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완중국 북한의 체제유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임.
 - 6자회담의 틀을 유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을 증대시켜왔기 때문임.
 - 북한과 전통우호관계에 있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북한의 ‘모험주의’도 자극하지 않으려 함.
 - 만일,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책임론이 부상할 경우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제재 및 압박 수단을 고려할 것임.

4. 우리의 대응

- 『반국가분열법』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일간의 갈등 전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함.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의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균형적 접근이 필요함.
-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주한미군의 대만문제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이례적으로 『반국가분열법』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북·중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바, 북·중관계의 발전이 북한의 대중 종속 및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및 교류의 확대
- 중국의 중재노력과 북·중관계의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함.
 - 6자회담 재개 시에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미·일 공조 하에 중국책임론을 부각시켜야 할 것임.
 -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시에는 중국과의 협조도 고려함.

VII.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 정책과 전망

■ 요약

- 2004년 6월말 베이징에서 제3차 6자회담이 열린 이후 9개월 동안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면서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 복귀를 위한 분위기 개선을 요구한 이후 미국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임.
- 북핵문제를 통한 6자회담은 ‘일본이 최대 수혜자’임. 일본은 북·일핵위기 편승, 미·일 밀월관계를 이용하여 改憲·軍事大國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와 핵보유 선언으로 아베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가 차기 총리후보 1순위가 되고, 고이즈미 총리는 인기를 회복함.
-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新한·일관계의 현안이 되고 있음.

1.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일본의 입장

- 지난 2002년 북·일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야기되기 시작한 일본의 반북강경노선은 현재 최고점에 이름.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후 이를 기다린 듯 일본정부와 언론은 대북강경론을 표방함.
- 고이즈미 총리는 북핵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의 핵보유 선언은 문장만 보면 문제지만, 과거의 공식 발표 어투와 감춰진 진의를 잘 생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도 북한과는 대화를 통하여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2.10).
-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진실은 북한이 핵무기화

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상당량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함(2.10). 일본정부는 6자회담을 대신할 각료급 회담을 적당한 시기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본은 앞으로도 김정일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교섭을 계속할 것임. 미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령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더 안정된 정권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임.
- 앞으로 일본의 대북정책 과제는 핵포기가 가장 이롭다는 점을 설득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임. 또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현재의 대북 경제재제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

- 보수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이번 핵보유 선언은 충격적 내용에 비해 억제된 어조이다. 이번 선언은 6자회담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교묘한 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로 가는 빌미를 주지 않으며, 미·일과 북한에 우호적인 한·중·러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협박에 과잉반응 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토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2.11)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한편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 개최 후 최대수혜국으로서 회담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 문제를 당장 안보리로 옮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함. 그러나 앞으로 이뤄질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 관계국들이 안보리 회부를 선택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후에는 미국의 입장에 따를 것으로 봄.
- 마이니치신문의 경우는 “이번 핵보유 선언은 언어를 통한 최대급 협박이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북한에 거친 비난을 자제해 왔는데도 북한이 굳이 미국을 자극하는 성명을 발표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미국 흔들기 전술이다. 지금까지 나온 최대치의 언어(말)에 의한 위협인 이번 성명은 일방적인 6자회담 파기나 탈퇴와는 다르다. 이번 성명의 목적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2기 부시 정권 흔들기이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선언한 것은 6자회담 ‘보이콧’과 더불어

-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과시한 것”(2.11)으로 관계국에 진지한 대응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전략 부재와 이라크전으로 여력이 없는 미국 상황을 탐색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협의 틀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요컨대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시간 끌기에 이용당한’ 6자회담 틀을 깨고 일본을 배제한 북·미·한·중 4개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일본 언론들의 대세임.
 - 그러나 보수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핵보유를 전제로 체제보장 등 핵포기의 대가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승부수이다. 분명한 것은 회담 참석 카드를 이용해 대가를 높이는 전략이다. 만에 하나 핵무기가 있다면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였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천명하면 6자회담의 회담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 포기과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엄연히 그 보상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 이라크전 외교의 후유증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이 제2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는 불가능하며 한·중·일 등 북한의 주변국은 북한의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1)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 분석을 하고 있음.
 -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은 “미국 강경파들의 신경을 거스를 북한의 우려되는 과격한 도발이다”(2.11)라고 짧은 논평을 냈으며, 대체로 일본 언론의 논조는 북한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음.
 -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이를 호기로 보고 지난 3월 15일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결함. 내용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판단에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부여된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함. 개정안은 미사일방어(MD)체제에 입각, 탄도미사일 등이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가 요격명령을 승인하며,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대처 가능토록 미리 총리가 승인해둔 긴급대처요령에 따라 방위청장관이 요격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요격절차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임. 이런 상태로 가면 곧 자위대는 군대가 되고 징병제도가 실시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며 곧바로 헌법개정으로 이어질 것임.
 - 최근 일련의 사건이후 강경일변도의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였음. 마이니치신문이 2월 11~1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천 69명을 대상으로

로 실시해 13일 보도한 전화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은 41%로, 작년 12월 조사 때보다 4% 상승했음.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1%, 민주당 20%, 공명당 4%, 공산당 3%, 사민당 1% 순이었음. 아울러 ‘지금 총리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로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22%로 1위를 차지했음. 현직 고이즈미 총리는 17%로 2위에 그치고,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직후 대북강경파인 아베신조가 총리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 1위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현재의 일본이 얼마나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또한 시기적으로 왜 이런 설문조사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직후에 실시되었는지도 다시금 짚어보아야 할 사항임. 이는 대북강경 입장을 일본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몰이 행위로 보여짐.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이후 그동안 독도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일본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형태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여론조사결과 차기 총리 1순위인 아베신조 간사장대리에 대한 일본 정계와 학계의 반응은 “지명도 평가일 뿐 총리 후보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음.
- 상기 내용들과는 상이하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를 두고 보수중심의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공개 표출된 것이라고 보도함 (2.16).
- 이러한 시각은 아베신조 간사장대리가 위원장인 ‘자민당 창당 50주년 프로젝트 실행위원회’가 기념사업의 기본방침을 정리한 문서에서 지난해 참의원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대로는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에 근거함. 문서는 선거패배의 원인에 대해 “국민에게 매력적인 비전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밀실정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의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물론 내부적인 반성이기는 하지만 일본국민들은 자신들의 우경화를 경계하는 측면도 있고 자민당의 독선적인 밀실정치를 싫어하는 면도 강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지지율은 자민당 31%, 민주당 20%, 공명당 4%로 국민 55%의 지지를 받아 우경화와 강경반북한노선을 주도하고 있음. 반면 지난 50여 년간 일본의 반보수화에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공산당 3%, 사민당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듯이 진보정당은 현재

중도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일본강경파에게 이익이 될지. 몰락의 서곡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이 현재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임.

2.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독도와 헌법개정문제)

● 독도를 포함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저의

-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수시로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축적, 차후에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유리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의 대체적인 윤곽과 내용

- 초안은 우선 ‘평화헌법’의 근간인 제9조 2항을 개정, 자위권과 군대 부활의 명분화하고 있음. 자위대는 일본의 군대로 격상되며,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이 부활됨으로써 자위를 명분으로 해외파병 등이 가능해짐.

● 신사참배 합법화 ‘천황국가’부활 추진부분

- 초안은 이와 함께 현행헌법의 ‘정교(政教) 분리’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사회적 의식의 범주내’라는 명분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종교 활동이 허용되면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헌법으로 허용된다는 것임.
- 자민당은 이같은 개헌안을 4월까지 확정지은 뒤 창당 50주년이 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후, 본격적인 개헌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음.

● 일본 내 네오콘 동향과 이들의 특징

- 최근 일본 내부의 과거사 왜곡이나 독도영유권 시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지금 고이즈미 내각에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일본판 ‘네오콘’으로 불리는 초강성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임.

●향후 일본에 대한 대응

- 가까운 시일에 독도문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됨. 따라서 우리의 냉정하고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감정에 치우쳐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실리는 물론 명분마저 잃는 우를 범할 소지가 높기 때문임.
-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담화에서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을 초래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일본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뒤 강력한 반발이 나오자, 외교 수사를 늘어놓으며 핵심을 피하는 ‘비켜나가기’ 수법을 또다시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일본외교의 현주소임.

3.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역사교과서 검정

- 1947년 3월 31일 일본정부는 교육기본법 공포 및 시행을 실시함. 이로써 戰前의 국정교과서제도가 폐지되고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됨.
- 본래 검정제도는 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국정제도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교육민주화의 일환으로 실시됨. 따라서 검정제도는 헌법, 교육 기본법의 정신에 합당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전제하에서 사상, 신조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어 있음. 검정은 원래 과거 전전의 내용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었는데, 1955년 보수정당 자민당이 다수정당으로 거듭나고 이후 문부성의 검정이 강화됨에 따라 역으로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음.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성격

-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이하 새역모)’에 집약된 일본 우익의 역사인식은 ‘자유주의 사관’이라 불려짐 ‘수정주의’라는 용어도 쓰지만 단순히 ‘고친다’는 의미로만 비취질 수 있어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기존 역사서술이 좌파적 시각에서 비롯된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하는 것과도 관련 있음.
- 1991년부터 자학사관을 비판하고 나선 새역모의 핵(核)심 인물인 도쿄대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는 자유주의 사관을 ‘사관(史觀)의 자유주의’로 정의함. 역사를 보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이 다양한 관점을 억누르지 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논리임. 이런 주장에는 역사서술에 대한 ‘책

입'을 굳이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녹아있음.

● '새역모' 모임을 비롯한 일본 내 우익 단체의 영향력

-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힘은 그들 주장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 이들에게 역사는 사실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 자부심을 주느냐 못 주느냐의 문제일 뿐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본 우익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함.

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책

● 독도문제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함. 지금 한국에 독도를 연구하는 일본전문가가 없는 것이 실로 아쉬울 뿐임. 일본을 모르고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소리만 높이는 독도전문가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음. 그 좋은 예가 '조용한 외교'임.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망발'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됨. 일본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의도로 영유권을 주장하는가를 분석해야 함. 다시 말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발언은 '법적근거보다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 아직 우리에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항하여 어업자원과 지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실오라기 같은 기회가 있음. 1999년 체결된 韓·日新漁業協定の 중간수역을 파기해야 함. 이 협정에는 다행스럽게도 중간수역을 파기할 수 있는 항목을 갖고 있음.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음.
- 이미 중간수역을 약속한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 시간의 경과를 파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임. 그러나 지금이 호기일 수 있음. 일본이 먼저 신뢰를 무시하고 '타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정하여 영토권을 주장했기 때문임.

●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 일본 내 역사교과서에 관한 우익들의 추이와 현 일본자민당이나 내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의 그간 언행을 볼 때,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우려가 제기됨.
- 현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힘없는 다수의 양심세력과 힘있는 소수의 강경론자들의 역사를 보는 시각차에 있음.
- 그러나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관계없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함.

종합토론

1.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관한 각국 입장 및 美 라이스 방중, 北 박봉주 방중 문제

-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를 인정할 경우 자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존재함.
- 마찬가지로 미·중·러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이는 관심을 갖는 쪽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중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며 미·북간 직접해결 분위기를 조성함.
- 북한은 6자회담을 북한문제를 논의하는 다자 틀이 아니라 핵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음.
 - 부시 취임사나 라이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라크문제의 핵심은 WMD가 아니라 후세인의 반민주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북한은 이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핵문제 자체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미국이 핵문제가 아닌 북한 정권 문제를 6자회담에 개입 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여짐.
 - 또한 3차 6자회담을 깬 것은 미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할 수 있음.
- 핵무기보유 선언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로 인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음.
 - 북·중, 북·러의 호전된 관계로 인해 근시일내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다른 제재 방법은 없음.
 - 북한은 강경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짐.
- 美 라이스 방·중, 北 박봉주 방중은 국제관계의 큰 틀에서 해석해야 함.
 - 중국에 있어 북핵문제와 대만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임.
 - 이들의 방중은 ‘하나의 중국’ 문제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과 대북경제지원 및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북한과 중국의 의도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임.

2. 6자회담 및 북핵문제 해결 전망

- 6자회담 재개 여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이 크게 진전되리라고는 보지 않음. 또한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이 급격한 파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함.
- 북핵문제의 장기화가 한국에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따라서 이러한 답보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이견이 표출됨.
 - 북핵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의 공통된 입장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를 시급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임.
 - 부시행정부 초반에는 미·중관계가 갈등구조였다가, 북핵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중관계가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었음.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은 이라크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방지하려 했고, 중국은 북핵문제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려는 보이지 않는 타협을 이룸.
 - 미국이 북핵문제를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또한 중국도 북핵문제를 통해서 부시 2기 행정부와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려는 측면도 있음. 북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실리를 최대한 챙기려 한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므로 한국은 이 시기를 전략적 돌파의 시점 또는 변화의 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북한의 불안정성 확대는 주변 관련국들의 레버리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중국의 경우 북핵문제의 교착국면은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영토보장을 받아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은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임.
 - 일본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재무장을 시도할 수 있음.
 - 6자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을 제외한 5자의 합의구조가 가능했기 때문임. 그러나 부시행정부 이후 합의구조가 깨지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의 처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부시 2기 들어 미·일관계와 북·중관계가 강화되고, 미·중 간에는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과 미·북·일과의 관계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한국이 특정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이 패자가 되는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중국의 역할을 들 수 있음. 북·중관계가 공고화되고 한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많아지면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북핵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됐을 때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함.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문제가 유엔에 상정될 경우 중국의 역할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움. 중국책임론을 강조할 경우 한국이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고려해야 함.
 - 북핵문제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적실성 있어 보임. 압박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미국에 대한 경계로 북한에 동조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중·러 전선이 공고화되고 있고, 한·미·일 공조가 깨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가가 상당히 큼.
 - 장기전으로 갈 경우,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실력과 기의 싸움이 될 것임.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보면 현재 상황은 어느 쪽으로도 확실히 기울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매우 가변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음.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많은 양보를 하였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정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됨.
 - 남북고위급회담이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한국이 패자가 되는 구도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그 이외의 방법으로 민족공조나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임.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매트릭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과는 항상 한·미관계 강화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었음.
 - 향후 정세전망과 관련하여 新냉전구도 형성 가능성과 그에 관한 입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됨.
 - 현재 한·미·일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를 대립축으로 하는 新냉전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新냉전구도의 전개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동북아 기득권 국가들은 新냉전 체제를 즐기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新냉전 상황에서 얻을 것이 없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은 한·미·일 관계에 편입되고 남북관계는 고립상태로 될 것임. 따라서 한국은 시급히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
- 新냉전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때 결국 국제적인 新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재의 구도는 국제관계에서의 지각변동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문제 해결을 일단계로 놓은 것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함.
 - 현재의 ‘흔들기’ 판세에서 중·일과 미·북으로 발생하는 동북아 질서의 긴장상태를 활용한 적절한 균형외교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을 현 구도에서 패배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3. 남북관계 전망

- 남북관계 전망에 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엇갈림.
- 북한 비료문제의 심각성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 비료문제로 장관급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함.
 - 쌀, 비료지원을 목적으로 장관급회담을 개최한 적은 없음. 그러나 장관급회담의 한 개 조항으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는 있었음. 내용은 비료지원이되, 포장은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음.
- 장관급회담은 비료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위급회담이 근시일내 개최되리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움.
 - 2002년 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해 볼 때, 2002년에는 비료와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간 채널은 가동되고 있었음. 그러나 작년 7월 당국간 회담이 끝난 이후 당국간 어떤 채널도 가동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장관급회담을 통해

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측 의견을 북한이 수용하여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인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좀 더 큰 틀(총리급 이상)에서 회담을 진행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 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유럽연합의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